

<출제 Point>

: 최초 기출 선지

① 한 문제에서 n개의 개념 묻는 문항 다수 출제

② "하이브리드 오답 (HB)" 이 트렌드

③ 9월 모평 대비 텍스트 길이 ↓ But, 한 가지라도 놓치면 문제 풀이 방향 상실하도록 유도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 1컷: 44점

1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 만점표점: 117점 (사탐 + 과탐 II 제외 117)

성명 [] 수험 번호 [] 제 [] 선택

95%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미술 협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에 대한 시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회원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정치로 볼 수 있어. 정치란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 간 발생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을: 내 생각은 달라. 정치란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므로 그 사례는 정치로 볼 수 없어.

- ① 갑의 관점은 국가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X
- ② 을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X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X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초대 가수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한 학생회 회의를 정치로 본다. O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X

93% # 법치주의 + 법의 이념 (정의 / 법적 안정성)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 행정 B: 실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A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그 자체에 의한 통치가 강조되어, 정당하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였다. 반면 B는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여, 입법자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구속되도록 한다.

- ① A는 행정 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O
- ② B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X
- ③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X
-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X
- ⑤ A와 B 모두 명목상 법률에 의해 통치 질서가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X

96%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 통일 지향

A는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가 A를 추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A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X V
- ②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X
- ③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O
- ④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X V
- ⑤ 학문과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X V

62% # 기본권 제한 요건 (과잉 금지 원칙) 4.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특정 기본권 주체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A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공익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하고 필요하며 법익의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한해 가능하다.

↳ 과잉 금지의 원칙

<보기>

- ㉠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수단의 적법성
- ㉡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피해의 최소화
- ㉢ A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쳤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62%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t+2 시기 중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다. 갑국의 t 시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각각 실시되었다. 표는 갑국에서 각 시기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C당	D당	
t	32	58	7	3	㉠
t+1	63	27	8	2	㉡
t+2	38	54	6	2	㉢ B당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① t 시기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X
- ② t+2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 과정에 관여한다. X
- ③ ㉠이 'B당'이라면,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X (HB)
- ④ ㉡과 ㉢이 동일하다면,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O
- ⑤ ㉠, ㉡, ㉢이 모두 동일하다면, t 시기와 달리 t+1 시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시 잦은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X (HB)

~ ④, ⑤: "하이브리드 오답" (정답같은 오답)

정치와 법